



[문의] 진명구 비서관 (02-784-6271)

국회 의원회관 518호

## “과학기술 Set-up, 창업 Boom-up” 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 발표

- 국가 주도, 단기성과 위주의 과학기술 및 창업 정책은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 효과 없어
- 과학기술과 창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정부는 지원체계 마련에 충실해야
-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 과학기술·창업혁명이 선도해 나갈 것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3월 7일 제2의 과학입국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이를 토대로 생기를 잃어 가고 있는 기업생태계 전반에 신선한 자극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기술 및 창업정책 공약, <“과학기술 Set-up, 창업 Boom-up”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여러 첨단기술의 융합혁명이다. 기존의 1차, 2차, 3차 혁명의 시대에는 한 가지 요소에 의해 산업구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본에 충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 3 가지 기반을 강조해 왔다. 이번 발표는 교육

혁명에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과학기술정책과 창업정책을 검토한 이른바 '과학기술 Set-up' 정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Boom-up'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먼저, 제2의 과학입국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과학기술정책으로, △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 국가연구개발 사업체제 전면적 혁신 △ 부족한 보건, 복지, 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 대폭 확충 △ 향후 5년간 청·장년 재교육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 인문·사회학·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국가위상을 높이고 인간중심 사회 구현 등을 제안하였다.

창업정책의 경우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하였다. 우선, 창업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혁명 △ 정부 주도가 아닌 조력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강조 △ 창업 지원체계의 컨트롤타워 및 민관 협의체 구축 등 창업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어서 창업 Boom-up을 위한 △ 기업가 양성기반 구축 △ 창업 지원기관 육성 △ 국가연구개발 체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혁 △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등 5가지 혁신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 “과학기술 셋업(Set-up), 창업 붐업(Boom-up)”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

### 1. 과학기술 셋업(Set-up) :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제2의 과학입국

- 1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 2 국가연구개발 사업 체제 전면적 혁신
- 3 부족한 보건, 복지, 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 대폭 확충
- 4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 5 인문사회학·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 2. 창업 붐업(Boom-up) : 창업 100°C 프로젝트

#### (1) 현황

#### (2) 창업혁명의 3대 기반 구축

- 1 정부는 민간 창업 지원의 조력자 역할
- 2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 및 민관협의체 구축
- 3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혁명

#### (3) 창업 붐업(Boom-up)을 위한 5가지 혁신 추진과제

- 1 기업가 양성기반 구축
- 2 창업 지원기관 육성
- 3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혁
- 4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 5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안철수 전 대표는 “그동안 준비 미흡으로 4차 산업혁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본에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펴고 이를 토대로 창업이 활성화 된다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한 과학기술 및 창업정책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7일

국민의당 안 철 수

<붙임 1> “과학기술 셋업(Set-up), 창업 붐업(Boom-up)”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 주요 내용

## “과학기술 셋업(Set-up), 창업 붐업(Boom-up)”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

### 1. 과학기술 셋업(Set-up) :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제2의 과학입국

#### (1) 현황

##### □ 양적인 규모에 비해 질적인 성과가 부족한 국가연구개발

- 국가연구개발비가 19.1조 정도임.
  -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계 1위, 절대액 기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 수준
  - 정부 연구개발 중 기초연구 보다 응용·개발 비중이 높음. 영향력이 큰 기초·원천 연구성과 부족
  - SCI논문, 2013년 기준, 5만1,051편으로 세계 12위 수준
  - 피인용횟수 2014년 기준, 4.86회로 세계 31위 수준
  - 사업화 성공률, 대한민국 20% 정도, 영국(70.7%), 미국(69.3%), 일본(54.1%)의 1/3 수준에도 못 미침

#####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은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보다는, 많은 부분을 민간의 ‘자율적 시도’에 맡겨져야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경쟁력이 회복됨.

- 정부는 규제합리화, 교통·통신·데이터의 기간망의 구축, 재정투자 등 담당 하되, 연구주체의 선택이나 투자의 배분에는 간섭하지 말아야 함
  - 특히 연구개발은 민간기관(기업, 대학, 정부연구소)의 주도로 위임해야 함.
- 과거 산업화시대의 정부주도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민간주도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시대적 요청임
  - 그러나 민간주도형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정부연구소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정부업무의 위임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체계를 수정해야 하며, 대학 및 정부연구소에 윤리적 행정체계가 들어와야 하는 양방향

의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은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 문화와 부처 이기주의임.

□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력산업의 부진, 인수공통 전염병의 창궐, 원자력 안전 문제, 기후 변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함.

- 과학기술을 단순히 경제 발전의 도구로서만 인식하던 것을 뛰어넘어, 환경, 보건, 안전 등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창달을 위한 활동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
  - 과학기술이 더 투입되어야 할 곳 : 정부정책 설계, 공공문제 해결 (원자력 안전, 조류독감, 구제역, 미세먼지 등), 지방산업 육성 등
  - 각 행정부처는 공공적 문제를 **국가 아젠다 프로젝트(NAP)**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관리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선진국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연구소의 능력을 활용해야 정부연구소의 연구능력도 성장할 수 있음
- GDP 대비 세계최고 수준 연구개발 투자(2017년 19조) 수준에 비해 성과는 불만족스러운 상황
  -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혹은 부서간 칸막이를 낮추고 융합연구와 협력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연구개발 예산 배분과 관리체제를 개편해야 함.
- 과학기술인 사기저하가 심각해서 인재에 대한 두뇌유출지수와 ( '15년:44위 /61개국),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은 ( '15년:29위 /IMD보고서) ○ECD국 중 최하위임.
  - 정부출연연구소의 자율성을 옥죄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연구자들의 도전적 연구를 가로막는 결과위주의 감사제도 등을 개선해야 함.

## (2) 정책비전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국가운영의 틀'을 지식 중심으로 재편하자.
-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창달을 이루자.

□ 국가 모든 영역에서의 개혁 방향 :

- 양(量) 중심에서 질(質) 중심으로 천이
- 개방과 협력이 가능한 경쟁과 안정의 조화

▪ 정부주도 → 민간주도  
 이제 정부는 앞에서 끌고 가려 하지 말고 뒤에서 밀어야 하며, 앞에는 과학기술인·기업인·예술인이 마음껏 뛰도록 정부가 먼저 길을 열어줘야 함 : 정부는 실패영역에만 개입하여 처방

### (3) 정책제안: 정책을 실현할 핵심적 세부과제와 실행 과제

#### ①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 정부 관료에 의한 기획과 이에 따른 자본 투입으로 과학기술 개발을 견인하던 기존 체계를 탈피
  - 계획 수립과 투자 시점과의 시차 문제해결, 과학기술인과 기업인의 부처 및 관료에 줄서기 풍토 개선
- 민간이 선도하고 정부는 도전적이고 자율적인 연구가 되도록 기반을 마련
  - 수요기술 공급, 애로기술 지원, 장비활용 및 전문가 연결, 기술 서비스 제공 등
  - 출연연 등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 강화
- 민간주도 전환으로 고도성장하는 연구개발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② 국가연구개발 사업 체제 전면적 혁신

##### □ 국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국가는 지원역할

- 부처를 뛰어넘는 융합형 연구를 위해 현재 명목상으로 운영되는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나 전략투자회의에 의한 연구개발비 조정이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실질적인 통합 운영 방식으로 개선
- 부처별 칸막이 없는 연구개발비 통합 집행으로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중복 투자나 투자 공백 등을 막고, 연구비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
- 현재 각 부처별로 관리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선정, 관리, 평가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연구자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행정 부담을 경감.
- 감사 방식을 “결과에 대한 감사” 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 로 전환

- 장기 과제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가에 의한 예산지원분야 선정

□ 수요처 연계형 응용 개발 연구지원

- 기술 분야 및 기술 공급자 중심의 연구사업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수요분야 별로 수요처(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계 응용개발 연구를 통해 연구 투자 효율성 증대 (수요분야 예시 : 자율자동차, 차세대에너지, 문화 콘텐츠, 정보 보안, 의료로봇 등등)
-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운영체계를 허용

□ 기초 연구비 대폭 확대 및 기초 학문 육성

-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Bottom-Up 기초연구비 확대
- 기초 학문의 중복연구를 허용하고, 과제 중심 연구비 지원이 아닌 연구자 중심 연구비 지원
- 기초연구 비중을 임기 중 50%까지 확대 (현재 39%)
- 풀뿌리 기초연구의 경우 결과 평가 면제 등 연구관리 최소화, 합리화 (지원 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Haldane 원칙에 따라 연구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
- 풀뿌리 자유공모과제 지원액 2배 확대

③ 부족한 보건의, 복지, 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 대폭 확충

□ 풍요롭고 다양하며 건강한 ‘국가지식생태계’의 구축 (4만 양병론)

- 현재 국가연구인력이 약 1.8만명인데, **5년간 4만명**(박사급 연구원, 엔지니어, 테크니션, 전문 행정직)를 **공개 선발**하여 정부연구소와 지방대학에 배치하고 공공문제해결과 지방산업 육성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인구	12.7천만명	8.1천만명	6.7천만명	4.9천만명
국가연구인력(국방제외)	약 10만명	약 8만명	약 7만명	약 1.8만명

- 국립대학 교수와 정부연구소 연구원의 처우(정년, 연봉 등)에 차이가 없게 함으로써, 학·연간 전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권장하고 상호 협력여건을 조성
- 40세까지의 신진연구인력 연구비 수혜율 100%로 상향(현재 80%수준)

#### □ 과학기술이 요구되는 곳에 전문인력 배치

- 지금까지 등한시 되어온 공공문제(조류독감, 구제역, 미세먼지, 워자력 안전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전문인력의 배치, ②연구비 투입, ③기술축적이 가능한 연구팀 운영의 전문행정과정이 요구됨
- 또한 지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에 별도의 부설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지역산업기술 연구에 대한 ①전문인력의 배치, ②연구비 투입, ③기술축적이 가능한 연구팀 운영의 전문행정과정이 요구됨

#### □ 과학기술을 통한 인류 공헌 확대

- 인수공통전염병, 미세 먼지 문제 해결, 복지용 로봇 개발 등 인간 중심 과학 기술개발과 기후변화 재해 예방 등 글로벌 이슈 대응 과학기술개발
- 우주 기술 및 자주 국방기술 개발
- 과학기술 ODA 사업으로 국격 제고

### ④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 □ 청년 및 중장년들을 교육시켜 4차 산업혁명의 기수로 10만명의 전문가 양성

- 4차 산업혁명 분야(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3D 프린팅 등)에서 전문인력 공급은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됨
  - 예를 들어, 세계 IoT 시장은 2015년 3,00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달러로 연평균 28.8% 성장할 것이며, 국내 IoT 시장도 연평균 38.5%의 성장을 예상(현대경제연구원)
- 이에 대비하여 미취업 청년, 실직자들에게 1년 정도 intensive하게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교육과정 : intensive 한 실습중시의 1년 과정 (3개월 X 4학기) : 수료증 배부
  - 교육장소 : 정부출연연구소 및 참여 대학
  - 교육규모 : 초기 년 20,000 명 수준으로 확대 (5년간 총 10만명)
  - 소요 예산 : 5년간 총 6천억원 정도

### ⑤ 인문사회학·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인간중심 사회구현



-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융합으로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도 필수
  - 예를 들어, 한국어의 음성인식이나 자동번역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ICT기술보다 한국어 말뭉치의 기초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임
-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⑥ 과학기술인 자긍심 고취 및 사회적 책무 강화**

- 출연연 연구자 정년 환원
- 여성친화적, 가족 친화적 과학기술일자리 문화 조성
  - 채용할당제 승진할당제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시간선택제, 시간연장형 직장어린이집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 2. 창업 Boom-Up! : 창업 100°C 프로젝트

### (1) 현황

#### ○ 기업생태계 전반의 활력 저하

- 2015년말 기준 세계 400명의 억만장자를 분석한 결과, 자수성가한 사람이 미국 71% (125명 중 89명), 아시아 79% (80명 중 63명), 중국 97% (29명 중 28명), 일본 100% (5명 전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0%였음 (5명 모두 상속받은 경우)
- 또한,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국내 상위 자산가의 10명중 7명은 상속받은 경우이고, 2000년대 이후 상위권 재벌, 특히 범 4대 재벌의 위상 변화가 거의 없는 등 기업생태계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 ○ 창업가 정신의 실종

- 특히 2000년대 초 벤처 붐 당시처럼 창업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움
-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창업 붐업” (Boom-up)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야 함

### (2) 창업혁명의 3대 기반 구축

#### ① 정부는 민간 창업 지원의 조력자 역할

- 민간의 창의와 자율,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져야 하는 창업 생태계에서 정부는 플레어어나 감독이 아닌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함

#### ○ 테스트마켓 제공 등

- 제품화에 성공한 창업기업의 유효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공공부문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테스트마켓(test market) 제공
- 정부와 스타트업이 손을 잡고 공동으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제3섹터 도입

○ 표준산업분류체계 재정비

- 기존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어려운 3D 프린팅과 무인 항공기(드론)의 경우 현황 파악 및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표준산업분류체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재정비

○ 창업 실패 경험의 사회적 자산화

- 성실 실패자의 경우 창업시장으로 선순환 위해 파산절차를 창업가 기준에서 리더자인 한 일명 ‘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 제도’ 도입
- 청년창업가의 경력위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창업 유경험자들을 관련 공공기관에 채용하도록 적극 지원

○ 해외시장 타겟형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유망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 해외 대학·기업과의 산학협력체계 구축하고, 글로벌 창업 교환학생 제도를 마련함
- Kotra를 활용하여 글로벌 벤처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함

②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가칭 “창업중소기업부”) 및 민관협의체 구축

- 창업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은 11개 부처의 소관이지만 조정·연계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이스라엘, 스웨덴 등은 단일부처가 수행
-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로 분산되어 연계·조정체계가 매우 미흡함
- 따라서 기업의 창업으로부터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일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부(가칭)”를 설립하여 일원화함
-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파괴적 혁신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부와 민간 혁신가, 혁신을 수용하는 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신산업 정책을 함께 소통하여 만들어가는 ‘협의체’를 구성

③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혁명

○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산업 또는 제품이 등장할지 예측하기 어려움
- 과거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로는 신산업 생성 및 육성에 한계가 있음
- 금지된 행위 외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규제혁명이 필요

○ 창업규제 개혁 및 창업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프로그램 마련

- 정부부처간 칸막이와 관료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가 창업의 진입장벽 또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혁명적으로 창업규제를 개혁하고, 필요시 개별 창업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마련
- ※ 박근혜 정부는 기존 대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거나 현장과 유리된 규제 완화의 개수로만 접근하였음. 즉, 외국 투기자본의 요구에는 서해지역 공군 레이더도 옮기면서 무인 항공기(드론)이나 푸드트럭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함

○ 규제가 없는 '창업드림랜드' 조성

- 노후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규제가 없는 창업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를 조성
- 을 검토

### (3) 창업 붐업(Boom-up)을 위한 5가지 혁신 추진과제

#### ① 기업가 양성기반 구축

- 창업혁명을 주도할 기업가 양성이 시급하며, 특히 전 세계를 무대로 창업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가진 기업가를 길러내야 함
- 학제개편 등 교육혁명을 통해 정규교육 과정에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교육을 확대
- 사업 아이디어를 실습해 볼 수 있는 동아리활동 활성화
- 예비 창업가는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일정한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성을 평가받도록 하고, 이미 창업한 기업가는 다양한 멘토링·컨설팅을 통해 성공가능성을 제고

#### ② 창업 지원기관 육성

- 창업단계에 창업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의 공간, 시설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회계 및 세무업무 등 사무지원업무를 제공하여 아이디어와 기술만을 가지고 창업이 가능하도록 함
- 제품화 단계에서 제품설계 및 시제품 제작이 쉽도록 팹랩(fab-lab),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대학·연구소 내 창작 공간 확대를 지원
- 창업 지원기관이 인큐베이터이자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와 금융기관이 교류하는 공간을 위한 데모데이 프로그램 등 지원

- 다양한 지식 융합을 위해 연구자, 기업가, 투자자, 사용자, 정부 및 시민 단체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오픈 이노베이터랩**’와 아버지세대와 자식세대가 함께 창업을 하도록 ‘**父子창업 플랫폼**’ 구축
- 창업기업의 신기술과 기존 중소기업의 제조능력, 대기업의 유통망을 묶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 플랫폼** 마련
- 지금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대로 된 창업센터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재편함
  - ※ 현 18개 센터의 공통의 업무인 세제, 금융, 법률, 글로벌 진출 지원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각 지역센터는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한 개방혁신센터로 재탄생

### ③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혁

- 창업기업은 자체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국책연구기관, 대학, 대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는 지식파급(knowledge spillover)이 더욱 중요함
- 따라서 국책연구소를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역할을 하도록 개편하고, 국가 연구개발을 첨단·융합 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개선
- 기업의 요구로 국책연구소가 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한 경우 **기술료를 회사의 주식으로 지불**할 수 있게 하여 현금지출 부담을 줄여줌
- 기술은행(기술거래소)을 통한 기술거래의 **기술료 지급 기준을 매출액 기준이 아닌 이익 기준**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부담 경감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IT·BT 융합,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신에너지 등의 원천기술 개발과 우주·항공, 의료바이오, 2차 전지, 소프트웨어, 신소재, 안전 등 미래형 신성장산업의 사업화 개발에 집중 투자
- 해외구매처 공동R&D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추진

### ④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 창업기회를 넓히기 위한 기회·혁신형 창업에 대한 창업자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
- 특히 창업이후 성장 및 중간회수 단계에서 엔젤펀드 및 모태펀드,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을 강화
- 회수 및 재도전 단계에서 M&A 활성화를 통해 벤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
- 패자부활을 위해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자금관리제도를 도입
-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감면 추진

## 5]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 ○ **시장 불공정거래 감시기능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특히 창업·벤처 기업을 제 값을 주고 사들이는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기술탈취·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획기적으로 강화
- 기업집단의 사익추구 일감몰아주기를 엄격히 제재하여 창업기업의 다양한 사업기회가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부여되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 ○ **지적재산권 시장의 활성화**

- 중소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해 정당한 가격이 지불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시장 활성화**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하는 특허무효화율이 60~70% 수준
- 이에 창업·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탈취하는 대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대항력을 높이고, 지적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선한특허괴물(Good Patent Troll)** 양성
- 선한특허괴물은 창업·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관리하되 대기업 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대리하고 손해배상액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얻음
- 선한특허괴물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특허 시장에서도 창업·중소기업의 특허와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음